분 야	서비스 정부(맞춤형 서비스)		
제 목	위치정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를 활용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사업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 추진배경

○ 국내 위치정보시장은 영세·스타트업 위주로 형성됨

※ 자본금 1억 미만의 사업자 42.9%, 설립5년 이하의 사업자(31.8%) 중심(15년 실태조사)

- 한편, 허가·신고사업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자금력 부족 등 애로사항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진입규제, 자금력 부족 등으로 인해 준비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15년 실태조사결과 분석에 의하면

- 사업자 애로사항 : 1순위 자금력 부족(33.6%), 2순위 법·제도적 규제(28.1%)
- 허가 및 신고 사업자 : 14년(128개), 15년(146개), 16.8월(94개)

○ 이에,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자원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토록 하여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유도

-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전, 위치정보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의적인 ICT 산업기반 마련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1)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16.1월) 발표

- (사업화 지원기능 강화) 위치정보산업 현황 및 사업자 애로사항을 고려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제고

- (법·제도 개선) 위치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잡힌 법·제도 정비를 통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위치정보산업 경쟁력 제고

※ 위치정보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자 애로사항 수렴 및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16.5.25)

○ 사업화 지원 강화

-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차세대 위치정보산업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 유도

-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영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법·기술·경영 등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여 위치정보 사업자들의 내실화 도모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

○ 정책 마련을 위한 진행 경과

- 2015 국내 위치정보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간('16.2월)
-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의견 수렴('16.4~)
- 사업자 의견 청취를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인터뷰 진행('16.8월)

○ 정책의 세부내용 수정

- 다양한 참가자의 공모전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공모전 재구성

※ 참가자 세분화, 지원내용 다양화 및 신청가능 비즈니스 모델 확대

- 사업자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턴트 인력풀 구성

※ 법·제도, 기술 등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

○ 위치정보 기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모델에 창업 지원

- 스타트업의 공모전 참여를 위한 회의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공모전 재구성

- 「2016 위치기반 App & Web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7.24~9.9)

※ (신청서 접수) 총 145건/ (1차심사) 10.5~6, (2차심사) 10.20~21

- 「2016 위치기반 App & Web 아이디어 공모전」 온·오프라인 홍보(7~8월)

○ 단순 위치정보 관련 허가·신고절차 상담을 벗어난 사업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2015 실태조사 결과 117개 사업자가 전문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전문 컨설턴트 인력풀 구성 및 온라인 컨설팅 채널 구축(5~6월)

- 법·기술·경영 분야 전문 컨설팅 수행(7월~)

※ (온라인) 공모 전용 홍보 홈페이지 게시(4곳), 뉴스레터 및 홍보메일 발송(46,812건) 등
(오프라인) 정부3.0 체험마당에 리플렛 배부(600부), 주요 창업센터 및 대학교 포스터 부착(약 700곳) 등

2) 위치정보 법·제도 개선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신규시장 진출부담 완화를 위해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한 진입규제 완화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 허가절차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상버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3개월→2개월)하고 사업계획서 우편제출 허용

- 소규모 기업(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시 신고없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는 간이신고제 신설

※ 신고간주사업자에 대해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청권, 실태조사권 등 사후통제 장치 마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양수·합병 시 사업계획서 변경사항만 제출하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 주요성과(결과)

○ 수요자 입장에서의 공모전 재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145건 접수

※ 관광 21, 검색 20, 레저 16, 소셜 13, 안전 17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신청

- 아이디어 진행 단계에 따라 스타트업을 아이디어 부문과 사업화 부문으로 심사할 예정

  • 1차 서류 통과자에 대해 맞춤형 전문 컨설팅(법/제도·기술·경영) 지원

  • 우수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출원비 지원, 투자자 연계행사 등 사업화 지원

  • 수상작에 대해 사업화 지원 이외에 시상 및 상금 수여

- 우수작 등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신고서류에 대해 우선지원

○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사업자 지원

- 사업자들에게 허가 및 신고절차 안내 등 민원상담

- 위치정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통해 중소사업자 지원(법·기술·경영 분야)

사례 요약) A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 중인 다른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확인·이용하여 주변 생활정보 공유 및 채팅 등이 가능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준비하던 중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시 준수해야 할 법·제도가 난해하여 사업화 진척이 더딘 상태였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을 마칠 수 있었으며 현재 해당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에 있음

○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동안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12월 중 국회 제출 예정

붙 임 **관련 참고자료**

o 위치정보산업 이용활성화 계획 발표

<보도자료(1.12, EBN)>

'위치정보 이용' 방안 마련, 산업 활성화 노린다

방통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발표…LBS시장 '활활' 예고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기사더보기 +

등록 : 2016-01-12 14:19

댓글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가

방통위가 위치정보 이용·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LBS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고도화', 그리고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내 LBS(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할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위치측위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 LBS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 및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등 신규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정보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긴급구조시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화재·구급·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성화 계획(안)>

창조적 LBS 산업발전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

2016. 1. 7.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허가기간 단축

<보도자료(3.7, 파이낸셜뉴스)>

경제>IT>정보통신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 심사기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6.03.07 15:25 | 수정 : 2016.03.07 15:25

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55개사가 지정돼있다.

지난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는 연 3회 시행됐고 심사기간은 3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장 선점을 위해 일각을 다투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허가신청 접수를 격월에 1번씩으로 단축해 허가심사 횟수를 확대하고 심사기간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의 후속조치인 이번 계획으로 위치정보 허가심사가 격월에 1번씩 시행될 경우,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사업 유연성이 제고될 것이란 전망이다.

o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5.25, 뉴스1)>

방통위,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뉴스1〉김보협 기자 | 2016-05-25 12:00:00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좋아요 공유하기 0 트윗 인쇄 | + 확대 | - 축소

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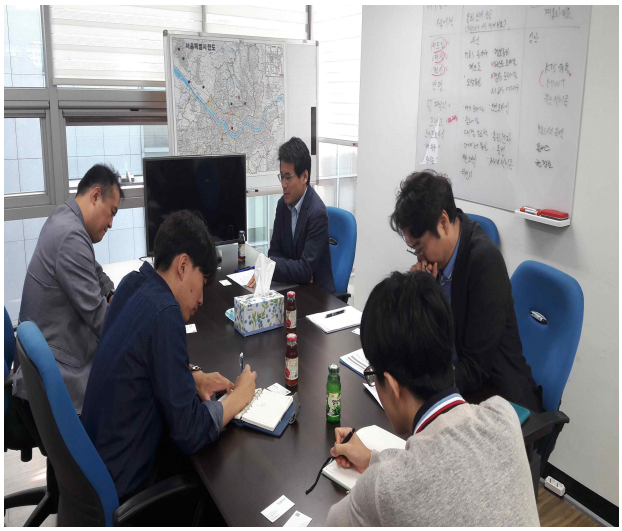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사업자와 만나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news1

정부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주요 위치정보산업 사업자와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 등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55개가 해당된다.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간담회>

o 공모전 방향 논의 및 신규 정책 등 의견수렴을 위한 인터뷰

<회의 및 인터뷰(7.15/9.21)>